주요국제문제분석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6-40

2006. 12. 26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한·중 FTA 전망

교 수 최 원 기

〈목 차〉

1. 한·중 FTA 논의 경과
2. 한·중 경제관계 현황
3.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
4. 한·중 FTA 전망
5. 고려사항

1. 한·중 FTA 논의 경과

○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했음.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감분야 도출 및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금년 11월 연구가 종료되었고, 공식적 연구결과는 연말에 제출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1월 17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실라이(Bo Xilai) 중국 상무부장이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이로써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산·관·학 연구는 사실상 FTA 예비협상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초 공동연구의 결과가 제출되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2007년 1년동안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 한·중 간 공식적 FTA 논의가 본격화…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한국은 이미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 연합(EFTA)·아세안(ASEAN)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인도와 협상중이며, EU와는 협상의 전단계인 예비실무회담을 2006년 2차례 개최한 바 있음. 한·EU FTA 협상이 2007년 개시되고 한·중 FTA가 2008년 추진된다면 중국은 EU에 이어 한국의 10번째 FTA 협상국이 될 것임.

〈한·중 FTA 추진경과〉

2002년:	중국, 한·중 FTA 공동연구제의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내에 TF팀 설치
200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5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6년:	민간공동연구 종료(11월)
	1년간의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11월)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예정)
2008년:	한·중 FTA 본격 협상 개시 (전망)

2. 한·중 경제관계 현황

가. 교역 현황

○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임.

-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제1위의 무역흑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수출국이자·제2위의 수입국임.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15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 1천억 불의 교역규모를 달성하였음.

〈對중국 교역규모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	314.9억 불	411.5억 불	570.2억 불	793.5억 불	1005.7억 불
수 출	181.9억 불(△1.4%)	237.5억 불(30.6%)	351.1억 불(47.8%)	497.6억 불(41.8%)	619.2억 불(24.4%)
수 입	133.0억 불(3.9%)	174.0억 불(30.8%)	219.1억 불(25.9%)	295.9억 불(35.0%)	386.5억 불(30.6%)
무역수지	48.9억 불	63.5억 불	132.0억 불	201.7억 불	232.7억 불

(자료: 외교통상부, 괄호안은 증가율)

○ 한국은 중간재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 저부가 가치 위주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음.

○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고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간재와 부품소재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소비재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

〈10대 수출입 품목〉

(2005년 기준)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가율	비중
반도체	71억 불	117.0%	11.5%	컴퓨터	33억 불	42.1%	8.5%
컴퓨터	51억 불	-5.1%	8.2%	의류	22억 불	4.5%	5.7%
광학기기	38억 불	113.3%	6.1%	철강판	20억 불	106.3%	5.2%
무선통신기기	37억 불	5.8%	6.0%	반도체	19억 불	36.7%	4.9%
합성수지	37억 불	19.8%	6.0%	석탄	15억 불	-1.8%	3.9%
철강판	34억 불	11.0%	5.5%	전자응용기기	15억 불	35.2%	3.9%
석유제품	33억 불	23.0%	5.3%	알루미늄	11억 불	17.1%	2.8%
자동차부품	27억 불	55.1%	4.4%	정밀화학원료	10억 불	35.3%	2.6%
석유화학합섬원료	25억 불	36.3%	4.0%	정전기기	9억 불	32.7%	2.3%
석유화학중간원료	16억 불	15.4%	2.6%	무선통신기기	8억 불	47.7%	2.1%
〈소 계〉	369억 불		59.5%	〈소 계〉	162억 불		42.0%
총 계	620억 불		100%	총 계	386억 불		100%

(자료: 외교통상부)

중국은 2006년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 역시 중국의 제4위의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으로 상호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며…

나. 투자현황

○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됨.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5년 말 현재 약 215억 불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과거의 특별한 제약 없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 외자기업의 상대적 중요성 감소에 따라 자국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유치하고자 하는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과거에 제약 없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던 전략을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으로 변화…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와 對중국 투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전 체	61억 불	64억 불	63억 불	59억 불	81억 불	92억 불	881억 불
대 중	10억 불	10억 불	21억 불	28억 불	37억 불	36억 불	215억 불
비 중	16.4%	15.6%	33.3%	47.5%	45.7%	39.1%	24.4%

(자료: 외교통상부, 누계는 1968~2005년 기간)

○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5년 현재, 17.6억 불로 전체 해외의 한국 직접 투자의 약 1.5%로 매우 미약한 실정임.

- 하지만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풍부한 외환보유를 기반으로 기술습득, 한국시장 개척 등의 목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해외의 對한국투자 규모와 중국의 투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전 체	152억 불	113억 불	91억 불	65억 불	128억 불	116억 불	1,155억 불
중 국	0.8억 불	0.7억 불	2.5억 불	0.5억 불	11.7억 불	0.7억 불	17.6억 불
비 중	0.5%	0.6%	2.7%	0.8%	9.1%	0.6%	1.5%

(자료: 외교통상부, 누계는 1962~2005년 기간)

다. 통상현안

○ 현재 한·중 간에는 중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음.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에는 15.2%, 자동차에는 25%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수입허가제도·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이외에도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 역시 양국 간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임.

○ 한국의 일방적 대중 무역흑자는 양국 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한·중 간에는 중국의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 한국의 일방적 흑자 지속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현안으로 대두…

3.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

가. 중국의 FTA 전략

○ 중국은 그동안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한국에 표명하였음.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이미 2005년 8월 쌀을 비롯한 우리 쪽 민감 품목에 대해서 예외인정 등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한·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하였다고 보도됨. 지난 2006년 5월 방한한 보실라이 중국 상무부장 역시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수 차례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중국의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한·미 FTA가 개시된 이래 더욱더 거세어져 왔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임.

○ 중국은 현재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 2006년 현재 36여개국과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거나 추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칠레·파키스탄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호주·남아공 및 중동의 걸프협력협의회(GCC) 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 외교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립 등의 주요 외교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 양자 간 무역 확대를 위한 경제협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발전과 관련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한국과의 FTA 추진은 한·미 FTA 개시이후 더욱 공세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FTA 정책이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나. 경제적 동기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국을 기술수준 등에서 따라잡을 만하고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FTA 파트너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일본·한국·

대만·아세안 중·이미 FTA를 기체결한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하게 FTA를 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국가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및 일본의 주도권 경쟁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외교전략적으로 FTA 정책을 운용하고…

- ㅇ 중국이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위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개혁에 많은 사회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함. 중국은 미국식 시장경제 제도보다는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경제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ㅇ 실제로 중국은 제11기 5개년 경제발전계획(11.5 규획)기간인 2006~2010에 '과학기술발전관'을 주창하고, 한국을 본받아야할 경제발전의 모델로 설정하여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과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ㅇ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구조조정 비용 및 양국 간 경제관계 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서 한국과의 FTA가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임.

다. 전략적 동기

(1) 외교전략적 고려

- ㅇ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대응 및 일본과 역내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전략적으로 FTA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ㅇ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FTA-아세안·뉴질랜드·호주 등과의 FTA-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

○ 한·중 FTA 역시 추진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발생할 무역전환효과로 중국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 중 FTA 우선 체결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한 것은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고,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미·중관계에서 한국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범위 내에 두려는 외교전략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중 FTA는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2)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

○ 한·중 FTA는 중·일관계의 차원-특히,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 확보의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중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국가들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FTA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일본보다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에서 뒤져있던 중국은 자국에 매우 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EHP: Early Harvest Program)와 같은 과감한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에 앞서 'ASEAN+1' 메카니즘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강화하였음.

○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농업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FTA에 대해 일본과는 사뭇 대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농업분야 개방문제에 대해 당초보다 매우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과 FTA 협상을 2004년 결렬시킨 데 반해, 중국은 농산물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중국의

FTA 조기체결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를 유보하고서라도 FTA 체결협상을 개시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라. 한반도 관리차원

○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 될 수 있고, 이는 한국·북한·중국 3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북한 김정일 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중국의 외교적 이해와도 부합함.

○ 한·중 FTA가 체결되고 북한과 남한·북한과 중국·남북한과 중국의 삼각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경제협력체를 중국이 선도하는 구도가 될 것이므로 이는 전략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임.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한·중 FTA 전망

가. 경제적 영향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추진시 17조 9천억 원(2.3%)의 GDP 증가가 예상됨.

- 제조업 분야는 26억 불의 무역흑자 확대가 예상됨.
- 농림수산물의 경우 90% 관세감축을 가정하면 수입액이 2004년 현재 21억 불에서 약 123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한·중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무역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FTA에 따른 수입 증가액은 100억 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 중 대부분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산물 분야는 1억 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2004년 KIEP 연구결과) 〉

구 분		FTA 체결전 (2004년)	FTA 체결후 금액	
			금 액	변동액
GDP		778조 4천억 원	796조 3천억 원	↑17조 9천억 원(2.30%)
1인당 국민소득		14,162 불(1,621만 원)	14,488 불(1,654만 원)	↑326 불(33만원)
산업별 무역수지	제조업	223억 불	249억 불	↑26억 불(11.7%)
	농림수산업	△21억 불	△123억 불	↓102억 불(486%)

(자료: 외교통상부, 농산물은 90% 관세감축, 여타 품목은 관세 완전철폐 및 자본축적 가정)

(2) 단기적 영향

○ 한국과 중국의 교역관계는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구조임. 이러한 구조에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단기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음.

-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비용 즉 생활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무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가의 생산품을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됨. 또한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 또한 증가할 수 있음.

(3) 장기적 영향

○ 한·중 FTA의 장기적인 동태적 효과는 양국이 FTA로 발생하는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한·중 FTA시 단기적인 무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한·중 FTA를 통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즉,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임.

- 한·중 FTA는 한·미 FTA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와 달리, 중국이 투자·서비스 등의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의 무역자유화 위주의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한국은 제조업 부분의 관세인하이외에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학습·혁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단기적 무역효과로 인한 호황으로 한국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음.
- 중국에게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격차 해소(catch-up)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한국산 재화 및 투자 확대로 인해 학습기회가 증가되어,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임. FTA로 한국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중국의 기술 학습 및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이 동태적 기술혁신 및 학습에 성공하면, 중국 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무역효과가 잠식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무역확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catch-up 가속화 및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효과의 삭감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 FTA로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나. 정치 · 외교적 영향

(1) 경제협력의 제도화

ㅇ 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함. 특히,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는 한·중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때로는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해 왔음.

ㅇ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급격히 증가 및 이에 따른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협력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나, 안보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ㅇ 한·중 FTA는 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2) 안보관계에 대한 영향

ㅇ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협력의 안보적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ies)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며, FTA가 단기적 관점에서 안보동맹을 강화시킨다든지, 안보이슈의 해결에 기여하리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ㅇ 양국의 한·중 FTA의 추진의 주요 동기는 안보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는 미미하고, 양국의 안보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물론 한·중 FTA는 경제적 관계의 긴밀화와 유대강화에 따른 양국 간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경제외적 이슈에서의 양국의 협력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양국 간 FTA의 안보적 효과를 과대평가 할 필요는 없을 것임.

(3)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ㅇ 한·중 FTA의 체결은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북한·중국 3자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며, 한·중 FTA를 통해 3국 간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기반이 확대될 것임.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될 것임.

- 북한이 한·중 FTA를 한·중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교로 인식하여 북한의 고립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미 한국과 중국 간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망임. 오히려 한·중 FTA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음.

한국·북한·중국 3자 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한·중 FTA를 통해 증진될 것으로 보이나, 한·중 FTA가 국내정치화될 경우에는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 중국은 한·중 FTA 추진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즉,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음.

(4) 국내정치적 영향

○ 기본적으로 한·중 FTA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 추진시 그 추진 의도에 대한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국내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 만약, 한·중 FTA가 국내정치 이슈화된다면 한·중 FTA의 추진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갈등이 야기되어, 한·중 및 한·미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중 FTA의 추진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또한 동북공정문제 및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따라 북한을 중국이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한다는 논리적 비약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이 남북한 모두를 예속시키려 한다는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정치적 해석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5)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영향

○ 한·중 FTA는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음.

○ 첫째,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중·일 간 역사 문제와 민족주의 및 지역 내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며,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그로 인한 외교안보적 불신은 역내 국가 간 FTA체결로 해소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음.

○ 둘째, 한·중 FTA는 추진될 경우 동아시아 내의 양자 간 FTA 경쟁 가속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FTA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동아시아 FTA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의 FTA 전략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양자 FTA 확산은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혼재로 인해 통관비용의 등의 경제적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소위, 스파게티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낳을 수도 있음.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이는 역내 지역통합 촉진의 초석(building block)이 아니라 걸림돌(stumbling block)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셋째,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간의 지역협력 움직임에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동북아/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단기간 내에 촉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중·일은 대부분 미국과 비대칭적 교역 및 투자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아세안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수출·투자·기술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수출시장에서의 결과에 따라 경제성장 추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이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내 주도국이 개방적 무역정책을 통해 역내의 잉여수출을 흡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은 지역경제통합의 단기적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음.

한·중 FTA는 동북아지역의 FTA 촉진에 기여할 것이나,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적 비토세력인 미국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역내 지역협력의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은 중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견지하되, 정부 부처 간 협의·조정 및 국내적 여건조성의 준비과정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 요컨대 한·중 FTA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성숙은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이 양자 간 FTA를 자국의 경제적/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한·중 FTA가 동아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5. 고려사항

가. 한·중 FTA에 대한 신중한 자세 견지

○ 한·중 FTA는 단기적 무역증진 효과, 중국시장에 대한 최우선의 접근성 확보, 양국 간 경제협력 제도화, 남북협력 및 북·중관계에 기여 및 지역내 FTA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하지만 한·중 FTA는 현재 중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체결시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대 등의 동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오히려 국내농업 기반의 상실, 국내산업공동화의 가속화 및 대중국 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 등의 부정적 경제효과가 예상됨. 또한 단기적으로 한·중 FTA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동북공정 등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논란 및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한·중 FT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중국의 FTA 추진 제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한·중 FTA는 한국이 반드시 체결해야 할 것이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기초로 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견지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 관련부처간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통한 입장조율 및 국내적 여건조성 등의 준비과정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나. 한·미 FTA 협상과의 전략적 연계성 고려

한·중 FTA 추진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 한·중 FTA 추진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를 상쇄하고자 하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한·중 FTA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는 한·미 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한·중 FTA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과 투자가 편향되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경제적 의존관계를 FTA라는 경제협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음.

○ 한·미 FTA는 우리기업의 미국수출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협상이 2007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우리는 한층 강화된 협상력을 가지고 중국과 한·중 FTA 추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협상의 구조와 내용을 한국에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있을 것임. 반대로 한·미 FTA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한·미 FTA가 불발되는 상황에서의 한·중 FTA 추진은 한·미 간 경제적 유대 약화 및 한국의 대중국 편향도 심화를 의미하며, 외교적으로도 한·중 FTA를 통한 중국의 대미견제의 성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여부의 최종결정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의 성사여부 및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전략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다. 한·중 FTA와 한·일 FTA의 동시 추진 검토

한·중 및 한·일 간 FTA의 동시 추진을 통해 일본과의 FTA 재개를 유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어…

○ 한·중 FTA 추진시 2004년 6차 협상이후 일본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한·일 FTA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은 무역 및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3국 간 FTA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효율적 분업구조 확립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한·중·일 3국 간 FTA는 3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한국이 가장 큰 경제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하지만 한·중·일 3국 간 FTA는 중·일 간 깊은 정치외교적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단기간내에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 한·중 FTA 추진시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 간 FTA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심적 역할(hub-and-spoke)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중국과의 FTA 추진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위한 유용한 협상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는 또한 한·중 FTA에서의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해야…

라. 한·중 FTA 추진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지향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한·중 FTA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된다면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 절대치(absolute gain)는 확대될 것이지만, 한국보다는 중국의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도록 함으로써, 한중 FTA로 부터의 한국의 상대적 이익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임.

○ 추진시 중국측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한·중 FTA 추진과 아울러 한국의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2006. 12. 1

토론: 교 수 **배긍찬**
교 수 **김흥규**
편집: 연 구 원 **황선희**

外交安保 構想의 産室

先進精銳 外交官의 産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t.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